

《 _____ 영어 세특 발표 자료 》

하이에듀

주제	모의고사 지문 응용 발표 자료
요약	모의고사 지문 내용을 응용하여 '잊힐 권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의 발표 가이드라인과 참고 자료 내용을 숙지하고, 발표를 준비하면 됩니다. 발표 흐름을 위해 한국의 잊힐 권리 법제화 사례를 언급하기 전,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도입한 잊힐 권리 관련 제도를 제시하고, 이러한 제도와 함께 한국의 제도를 제시하면 됩니다. 결론에서는 발표에 대한 요약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면 됩니다.

[세특 발표 가이드라인]

- 아래의 내용은 모의고사 지문을 토대로 발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면 될 자료입니다. 발표 분량이나 형식에 따라 PPT 제작 순서에 활용하여도 되고, 보고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1. 서론 - 발표 동기

- 모의고사 지문 내용을 요약하며, 해당 내용을 발표하게 된 동기를 제시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

2022년 11월 모의고사 36번 지문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잊힐 권리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정보에 대해 적용되며,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삶의 특정한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 삶이 정의되지 않도록 합니다. 해당 지문에서는 이러한 잊힐 권리에 대하여 해외 법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한국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해 어떤 법으로 보장하고 있을지를 탐구하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지문 해석>

잊힐 권리는 사생활 권리와 구별되지만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 사생활 권리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보호되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대한 권리이다. 반면에 잊힐 권리는 공공의 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특정 시점의 정보에 의해 영원히 정의되지 않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그러한 권리의 한 가지 이유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고자

신의 삶의 특정한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 정의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의 범죄 유죄 판결조차도 결국 '소모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잊힐 권리를 지지하는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힐 권리는 다른 권리와 때때로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예외가 안보와 공공 보건의 이유로 인해 때때로만 들어진다.

2. 잊힐 권리의 중요성

- 잊힐 권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잊힐 권리의 헌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된다.

<작성 예시>

그렇다면, 잊힐 권리는 어떤 근거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입니다. 즉, 헌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 실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잊힐 권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접근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기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포섭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일부를 구체화하여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문제삼는 점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잊힐 권리가 누리망에 공개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격 실현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면 잊힐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3. 잊힐 권리에 대한 해외 법 사례

-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해외의 법률 사례를 정리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

다음으로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문에서 제시된 영국, 프랑스와 같이 독일에서도 살인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검색엔진들이 검색 결과를 지워 달라는 개인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을 정도로 잊힐 권리의 보장을 강조합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연방법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할 경우, 수정헌법 제1조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자율적인 규제를 도입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와 가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부 잊힐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4. 한국에서 제시된 잊힐 권리 관련 이슈

-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법제화

<작성 예시>

이러한 해외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모든 국민들의 전반적인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나 부모가 온라인에 올린 사진을 비롯한 개인 정보의 삭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화 계획을 통해 범정부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 및 강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법제화>

이번에 발표한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 계획 중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2024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또는 블라인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2024년에는 그 삭제 대상 게시물을 본인이 올린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올린 것까지 확대해서 법제화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유형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의 정보와 정보주체가 게시한 글을 제3자가 공유(링크, 복제 등)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제3자의 게시물은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글·사진·영상 등을 올린 경우 및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게시물을 올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유형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계획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잊힐 권리의 법제화와 관련해서 삭제 대상 게시물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알 권리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권리행사 요건을 정하는 것과 범죄수사, 법원의 재판진행, 법적 의무 준수와 같은 합리적인 제한사유를 규정하여 법익 보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는 온라인 게시물의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술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2023년에 추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5. 결론

- 발표 내용 정리
- 발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작성 예시>

‘잊힐 권리’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잊힐 권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해외의 잊힐 권리 보장 사례, 한국의 법제화 논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권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법제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요약 자료]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잊힐 권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이다.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에서 문제 되었다. 그런데도 잊힐 권리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누리망에 공개되면서 이전과 다른 문제 상황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 이때 정보주체가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이러한 정보가 자기 의도에 어긋나거나 자기 인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내용은 정보 삭제나 접근 배제이다. 정보 삭제와 정보 접근 배제는 의미상 구분되어서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접근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기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포섭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일부를 구체화하여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문제 삼는 점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잊힐 권리가 누리망에 공개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격 실현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

론다는 점에 주목하면 잊힐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1) 잊힐 권리의 주체는 누리망에 공개된 정보에 따라서 인격 실현에 영향을 받게 된 살아 있는 개인, 즉 정보주체이다. 인격적 법익이 제약되어야 비로소 잊힐 권리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는 인격적 법익을 전제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주체는 인격적 법익을 누리는 개인에 국한된다. (2) 잊힐 권리의 보호대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여기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주인, 즉 정보주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된다. 정보주체를 알 수 없는 정보는 정보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잊힐 권리의 핵심은 누리망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말미암아 제약받는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잊힐 권리가 일반적 인격권을 헌법적 근거로 삼는 것에서 비롯하는 당연한 전제이다. 이러한 인격권 제약에서 정보의 삭제나 접근 배제에 관한 청구권이 도출된다. (4) 자유로운 인격 실현 방해 제거를 위한 잊힐 권리의 내용은 개인에 관한 정보 삭제나 접근 배제이다. 잊힐 권리는 스스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정보 삭제나 접근 배제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누리망 출현으로 말미암아 실질적 잊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잊힐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실질적 잊힘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잊힐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누리망 출현 이전보다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수준이 낮아져서는 아니 된다. 역사적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이다. 그래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여 역사적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잊힐 권리는 제한된다(예를 들어 친일부역자와 반헌법행위자의 행적).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35853>

[관련 자료]

1.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제도화

출처: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0152?serial=180152>

2. 아동·청소년들, 온라인서 '잊힐 권리' 확대....2024년 법제화

출처: <http://m.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08>

3. 독일 헌법재판소, 살인자에게 '잊힐 권리' 인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57644>

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 예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출처: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45210&list.do?pageIndex=1&brdclasscode=&nationcode=&searchText=&servicecode=06&searchTarget=ALL&brdctsstatecode=>

5. 잊혀질 권리: 독일 최고법원, '살인자도 잊혀질 권리 있다'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50602625>

6. 디지털 잊힐권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선진국 입법 사례]

출처: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65>